

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10월 월례회의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3시-6시

장소: 서울대학교 두레미담

참석자: 전재성, 민병원, 이정환, 김애경, 은용수, 신기영, 이용욱, 조은정, 김지영, 박지영, 김재영, 이규원, 박소영, 용채영, 천미송, 조수현

발표1_ 전재성,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과 안보문제”

중형단계 프로젝트의 전체 취지는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이론화하자. 소형단계의 이론적 시각을 발전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방적인 zero-base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각자의 연구를 하되, 동아시아 전체를 이론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합조직원리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볼 때 서구의 전형적인 국제체제와는 다른데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개념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제기. 개인적으로는 메타이론이나 이론적, 개념적 차원의 연구를 해왔는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적용되는지, 중범위 이론의 내용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서 경험적 이론화의 가능성, problem-solving이론이 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의 안보와 관련되어 이론적 시각을 기반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A Theoretical explanation of Evolving Northeast Asian Architecture: The “Incompleteness” of Sovereignty

동북아의 국제정치, 안보 아키텍처에 대한 이론이 많다. 기존 IR 이론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이론화하려고 한다. 메타이론적 기반은 대개 전형적 세력균형 체제를 가정, 서구의 실증주의적 부분이 많다. 민족주의, 정체성 부분이 등장하면서 부분적으론 구성주의, 해석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군사 중심이고 IPE도 현실주의적 제도적 balancing 등을 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것만 볼 수 있는가? 단위 성격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는 와중에 주권성, 동북아 단위들의 주권성에만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 안보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기존 서구이론들이 의미가 있는데, 단위들의 주권성이 불완전하다면, 분단된 남북한의 주권구성도 국제법, 경험적으로도 주권성에 한계가 있다. 중국, 대만도 마찬가지. 일본도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완전한 의미의 sovereign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전의 패전국가의 주권성을 회복하지 못함. 불완전한 단위들 간의 안보관계가 어떻게 보일 수 있나?

냉전기는 불완전한 단위들이 semi-, pseudo-한 것이 자연스러웠다. 소련, 미국처럼 역외 imperial 한 국가들이 불완전 국가들이 주권처럼 행동하도록 세력균형을 추동해왔다. 이제는 냉전의 양극체제의 논리가 없어진 뒤, 불완전성에 기반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미중관계, 한중일, 한일 안보협력에 적용하면 어떤 다른 결과가 있을까?

미중관계를 전형적 세력전으로 보거나, 현실주의-자유주의가 보는 것과 같이 보는 시각이 있다. 즉, 두 개의 패권국가들이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는 상황으로 미중관계를 볼 수 있다. 그러

나 중국이 패권화하려는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이 incomplete한데, incomplete을 modern sovereign하려는 과정의 담론들을 보면, 하나의 근대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더 넓은 차원, 핵심이익이나 영토에 대한 생각, 중국의 꿈, 중국이 가정하는 영향력 등은 근대 국제정치에서 논하던 것보단 다르고 이전의 제국적인, 전통적인 조직원리나 비전이 같이 부활되는 부분이 있다. 이미 근대국가화가 완성된 이후의 power transition과는 달리, 100년간의 치용 이후, 미완성된 근대국가인 과정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패권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닌가? 주권은 영토, 국민, sovereignty의 개념의 문제인데 근대를 기반으로 패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대화와 패권화가 동시에 되는 과정. re-imperialize되는 과정에 있다. imperial의 회복의 준거점은 근대 이전의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으므로 근대적 국제정치로는 잘 분석이 안 된다. 신형대국관계의 내용도 그러하고, '핵심이익'을 미국은 근대적 의미로 부활시키려고 하지만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단 뿌리가 깊다.

현실주의, 자유주의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TPP, 현실주의적 경제논리가 깔려있고, 자유주의적 제도를 활용하는 형태이다. 기존에는 현실주의/자유주의를 배타적인 카테고리라고 생각해왔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 경제적 상호의존이 political-free는 아니다.

안보 딜레마도 공세적, 방어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안보딜레마가 공격적인 강대국 간의 안보경쟁보다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안보경쟁이 되길 바란다. 공격적 의도가 없다는 benign intention의 reassurance가 되면 좋은데, 그게 되기 잘 어렵다. 중국의 패권국화가 assertive하게 보여지는데, 근대적 의미에서 assertive하다기 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의미에서 aggressive하다. 미국의 표현은 중국이 rule-based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rule이 modern rule이 아니다. 중국이 rule을 알면서 modern rule을 바꾸려고 하는지, 구조적 rule을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imperial master plan이 깔린 느낌이 든다. 미중 간 수십 개의 전략채널이 있지만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즉, 단위의 성격이 방어적 현실주의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안보이론을 뒷받침한 이론들이 근대이행의 불완전성 하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것이 미중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개의 불완전한 주권국가 간 관계이기 때문에 미중 세력전이가 크게 헤징(hedging) 관계로 여겨지는데, 미중 사이에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상당한 variation이 생기는데, 한국은 미중 사이 기회주의적 외교. 일본은 미국 쪽에 더 가까이에서 한국에게 헤징을 하라고 하는데, 둘 다 완성되지 않은 주권성을 회복하려는 project가 더 근본적이다. 근대 국제정치 안에서 움직이기보다 근대를 완성해야 하는 더 아래의 계획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으로 분석되기 어려운 국가 목적이다. 세력전이의 logic은 modern balance of power logic으로 가는데, 이 기회를 최대한 자기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중국과 잘 지내야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함. 한국은 온전한 주권국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미중 사이의 헤징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거라고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긴 어렵다. 그것과 차원이 다른 국가목적이 있기 때문.

일본의 보통국가화도 단순 미일동맹 강화로 중국으로부터의 이익을 더 얻어낸다는 것 보다 불

완전성이 interest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정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 이는 미중의 세력전이에서 표출될 때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한일의 미중관계 속의 정책 편차는 냉전기의 협력처럼, 왜 갑자기 다르게 나타나는가? 냉전기는 semi-modern처럼 행동할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미중 안보문제가 되기 전에 한국은 독특한 modern project를 갖고 움직이고 있음. 한일의 역사문제, 민족주의 갈등이라는 것이 identity의 갈등이 아니라 더 구조적인 문제. 동북아 아키텍처의 불완전성에서 imbedded 되어서 나오는 문제. 한일 잘 지내고, 중일 잘 지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일이 modern-sovereign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군사-협력-liberal하게 갈 수 있는 경로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슈별로도 군사, 사회문화적 층위에서도 서로 다른 목적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한일 안보협력이 미숙하고, underbalancing의 딜레마에 걸려있는데, 미국은 양자의 민족주의 갈등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중국의 부상이 위협적이게 된다고 해도, 한국은 분단극복을 위해 중국과 계속 협력하려 할 것이고, 일본은 중국의 부상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보통국가화를 위해 그 로직을 활용할 것이다. 즉, 현실주의-자유주의를 근대국가들 사이에 적용하는 것처럼 적용하면 잘 안 맞는다. 구성주의도 역사, 기억의 정치 이야기하는데 단일 민족주의의 identity로는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은 incomplete state sovereignty로서 계속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 동북아의 국제정치는 full sovereignty를 향한 단위들 간의 노력이 추동되고 있고, 그 위에 얹혀진 IR 안보 이론들을 다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다 해결된 상황을 비전으로 삼을 때, 동북아 안보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딜레마이나 더 깊은 딜레마이다. 단순히 의도가 아니다. 서로 modernize할 때, 저쪽이 제국화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다. 중국도 근대화하는 것 같지만 중국의 전통적 imperialism이라고 생각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로 더욱 나쁘게 안보딜레마가 걸려서 더 공세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게 된다. 단위의 불완전성이 기존의 이론을 왜곡시키는 방법과 그 경험적인 양상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s Deterrence Strategy

북한 대량살상무기, 통상무기의 억지에 대한 전략을 살펴봄. 기본은 억지가 걸려야한다는 것임. 기존의 억지이론의 문헌으로 잡히지 않는 점이 있는데, 남북은 분단국가. 보통국가처럼 평화공존이 end state가 아님. 통일이 end state임. 억지와 통일을 동시에 추진해야 해서, 억지의 논리도 상당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불안정한 주권국가들 사이의 억지는 어떻게 걸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함.

기존의 억지 논의들은 미소 속의 초강대국 간의 상호 핵억지를 다뤘었음. 지역적 억지이론이 좀 나오고, 비대칭적인 억지 이론이 나옴. 북한을 많이 다루는 데 이제 사실 상의 핵 국가가 됨. 사실상의 핵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억지를 어떻게 걸 수 있나? 북한의 핵무기 능력, 2차 타격 능력이 있는지, rationality 도 중요. 억지의 3C는 capability, communication, credibility가 중요함. 억지는 사회적 구성인데 미소 간 관계에서도 소련의 문서들을 보니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련이 억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억지가 rationality를 상정하지만 rationality가 contextual rationality이므로, context를 먼저 맞춰서 rationality를 mutual-socially 맞춰야 함. 남북한은 더욱 그렇다. 한국은 억지를 걸되, 일정 수준 균형

(balancing)이 맞춰지면 관여(engage)를 해서 통일하려고 함. 역지가 먼저 달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여, 통일로 가야 함. 우리가 제대로 역지를 하려면 이걸 다 염두 해야 한다. 역지에 대한 구성주의적, 4th generation의 연구가 필요하다.

더 어려운 점은 김정은 등장 이후, 김정은이 기존의 역지 논리를 잘 모른다는 점에서 learning process가 필요하다. 북한이 rational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김정은 자체는 rational하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체붕괴나 흡수통일 시의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정권유지, 개인안보의 추구임. 그 때 핵을 써서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우리는 통일, 북한의 소멸까지 생각한 역지임. 무조건 몰아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한 학자는 general, immediate deterrence를 나눔. 한국은 immediate만 보는 것 같은데, 넓은 맥락의 정치적, general한 역지를 갖고 가야 한다. 그 이후 관여도 이와 연속선상에서 가야 한다. 신뢰외교가 1단계는 역지, 2단계는 관여임. 전체 맥락 속의 역지 게임으로 재구성해보자. 좁은 수준의 이론에 들어가 있지만 동북아 국제정치 속 주권의 불안전성이 각 이슈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의 문제의식이다. 다른 이슈영역에서도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음. 다른 지역은 또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중. 그런 면에서 서구 구미권의 완전한 주권국가들 간의 상호작용과 비서구의 불안정한 주권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이 공존하는 것이 근대국제정치에서 사실 정상적이다. 중, 일, 한 다 정상 주권국가화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이 정상일 수도 있다.

<토론>

은용수: 주권의 미완성, incomplete 주권의 이론으로 동아시아 정치를 보는 것에 공감하고 흥미로운 접근이다. 하지만 incomplete sovereignty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양한 측면에서는 근대 주권국가의 개념정의를 할 때, 베버의 이야기를 하면 합법적 폭력 사용의 독점을 갖고 있으면 근대 주권국가의 중요 카테고리, 개념정의로 봄. 합법적 폭력 사용의 독점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한국, 중국이 불안정한가? 중국은 대만문제가 있고, 한국은 북한 문제가 있지만 미완성의 틀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일본의 우경화 또는 헌법 개정 문제 등. 일본의 안보행위나 정치제도, 헌법변경의 사태들은 주권의 미완성의 개념 틀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음. monopoly의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적용되나?

전재성: 베버적으로 말하면 폭력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데, 근대국가의 세 요소는 주권에 대한 상호인정, 국민에 대한 명확한 카테고리, 배타적 영토성이다. 한국은 근대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competing하는 단위들이 사적폭력을 갖고 있다가, 영토군주가 일정 영역의 폭력을 독점하게 됨. 정당성에 대한 내부 행위자들 간의 싸움도 있고, 사회적 인정도 있고. 남북한은 헌법적으로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에 대해 정당한 독점적 폭력을 소유하는가? 독점적이진 않음. 정당성을 싸우고 있음.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recognized되는 것의 문제는 있음. 국제법적으로는 둘 다 주권으로 인정되지만 헌법적으로는 양국이 갈등관계가 있음. 진보 쪽은 헌법을 바꾸자고 함. 두 개의 주권국가가 되면, 김정은의 안보불안이 줄고 평화체계가 만들기 쉽다. 그러나 한국의 주권성, 영토, 폭력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된다.

냉전기는 남북한이 주권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미소가 input하고 승인게임에서 미소가 해줌. 하나의 주장은 우리의 주권 logic이라는 것은 강대국들의 세력정치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성의 status가 manipulate되는 것이 제 3세계의 국제정치이다. 영토 부분도 독도문제 등. 영토문제의 해결은 서구는 전쟁을 통해 깔끔하게 조약에서 해결. 우리는 역사사회학적 의미에서 영토를 상호 간 나눠가지는 우리끼리의 전쟁을 해보지 못함. 소위 'war makes states, states make war'를 거치지 못함. 남북한의 전쟁이 우리끼리의 근대이행 전쟁이 되지 못하고 offshore의 전쟁이 같이 개입되어서, 그 모순의 결절점이 샌프란시스코의 체제였다. 우리끼리 다자적으로 영토 나누고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했고, 미국의 냉전논리에 따라 reversal policy의 정책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베버적으로 정당한 근대국가인데, 다른 논리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함께 이론화를 하는가? 그 모든 책임을 강대국 국제정치에 돌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내용이 단순화된다. 크라스너가 말하는 logic of consequence와 logic of appropriateness에서 결과의 논리가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은용수: 미중관계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주권국가를 완성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다고 보셨는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음. 하지만 또 다른 변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나? 중국학자들도 이야기하는 identity의 문제. 냉전기 때는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안 혁명국가로 보다가 넘어가면서 정상국가로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현실, 자유주의 모두 national interest들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의 방법론적 논쟁이 있었음. 스스로의 identity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생김. 그런 문제, 주권의 미완성의 문제와 함께 identity, 전략적 identity나 culture의 문제를 같이 넣을 수 있다면?

전재성: 중요한 문제. 근대 이행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under-sovereign하다고 본다면, 적절하게 sovereign하지 않고, over-sovereign해지는 것이 있는 듯. 근대국가로서의 강대국의 status를 원하는지, 근대 국제정치를 다 바꾸는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것도 있음. 그런 면에서 중국이 너무 성공적이다 보면 주권국가화는 서로 간의 주권을 recognize하는 게임이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해서 이를 침식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를 바라는 여러 매커니즘, 중화주의, 여론 등이 있음. 그런 balancing을 할 때, 강대국 균형이 아니라 중국이 부활시키려고 하는 imperial한 조직 원리를 balancing해야 하는 문제이다.

조은정: 비서구 이론에 대한 메타이론적 검토가 많이 되는 중임. 이를 해야 하는 기본 가정, 일본의 주권국가화, 한국의 통일, 중국의 정상국가화되면...? 유럽과 같은 유럽통합이나 지역체제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동아시아가 보다 온전한 국가로서 발돋움 될 수 있다? 대등한 국제정치행위자로서 행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 대해서 시험해봐야 하는 궁금증이 있다. 과연 근대국가가 되면 한중일이 부족한 결핍들이 되면, 결핍들이 다 채워지면 국가 모델들에 따라서 정말 다 행복해지고 평화가 올 것인가, 궁극적으로?

혹은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유선 형태를 집에서 쓰다가 무선이 당연해짐. 섬나라에서는 오히려 전화가 모르다가 무선 핸드폰을 씀. 새로운 concept을 가짐. 그 만큼 발전이 있어서 유선을 안 거치고 무선, 인터넷으로 바로 이동했듯이, 동아시아에서도 꼭 유럽모델처럼...이런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게으른 생각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존의 다른 지역의 담론에 기대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저희의 노력.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 비서구 IR의 분석, 대안의 제시가 기존의

IR 분석과의 접점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전재성: 메타 이론적 가정은 더 생각해봐야 함. 중국이 근대국가화되는 과정에서 더 전혀 다른 조직원리, 연쇄통처럼 순자의 부활. 등 의식, perception에 관련된 부분임. 이는 상당한 문화적인 turn이 있어야 함. 인식론 등 만약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리고 modernity가 아닌 modernities를 논의하는 쪽도 있고 발전이론은 하나의 modernity가 하나이며 서구의 경로를 따르는 것과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underdevelopment과 development도 같이 가야하고, 여러 다른 modernities들이 있다고 봄. 소위 under-sovereignty 하의 서구는 sovereignty가 가능하다는 어닐로지가 있다. 안보문제에서 미소 냉전기는 미소가 개입하는 단위들의 주권성이 불완전할수록 개입가능성이 더 높고 다 sovereign으로 만들지 않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음. 이론적으로 더 개념화를 했으면 하는 단계. 그런 점에서 기존 IR들이 의미가 있되, 같은 수준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을 수 있는 한계, 사례들이 있음. 따라서 옳을 수 있는 것 자체를 설명해줄 수 있고,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holistic한 이론이 필요하다.

김지영: 탈냉전시대는 incomplete sovereignty는 밖에서 보기에 불안정한 한국, 작전권 없음. 북한, 경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봉쇄. 대만, UN으로부터 불인정. 동북아 안보의 핵심문제는 한국, 북한, 대만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많음. 중국이 완전한 주권성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데, 구성된다고 말씀한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은 유럽, 서구가 기존에 constructing해왔던 주권을 자기 나름의 패러다임, 유교, 순자 등으로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주권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중국이 더 확장된다면, 중국만의 주권개념이 서양의 주권개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중국의 주권개념을 incomplete sovereignty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상호인정, 군사, 경제적 주권, 정체성의 주권으로 분리해서 한국-북한-일본-대만의 불안정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출발하게 되면 이론을 명확하게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재성: 동주의 책. 근대국가-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 국가. 이를 제 3세계국가들도 공유하는데, 식민지 국가는 아님. 군사, 경제국가의 성격은 공히 가진다. 북한도 스스로 군사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국가로서 sovereignty가 침해받는다고 생각. 선진국의 분석은 자기의 interest를 확장하는 의미였는데, 자신의 군사력의 유용성을 증명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즉, 왜곡된 근대국가적 성격이 있다. 경제성장도 계속 해야 함. 근대국가의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되, 어렵게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다. 전통시대 중국의 전략으로 보면, 중국은 분열왕조. 통일왕조로서 오래 가지도 못함. 중국은 국제정치를 보는 것이 imperial하지만 defensive한다. 소련의 X-article에서 소련을 define해야만 미소관계 시작했던 것처럼 중국을 define해야 하는데 중국은 팽창적, 공격적이지 않았다. border도 약하고, 명나라도 방어적, 수세적이거나 imperial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중국도 공격적 modern-state보다는 방어적 imperial state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약간 overbalancing하는 것 같음. 수세적이면 나라가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더 공격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음. 대륙국가-해양국가의 차이일 수도 있음.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할지? 소련의 생각은 항상 세계대전에서 침략을 당해왔고, 자기 방어를 위해 굉장히 offensive하게 행동하므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그렇게 안보고, 공격적 제국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고 있어서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

다. 일본은? 근대화과정의 독특한 착각, 정체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 잘 모르겠다. imperial 한 거라고 보기엔 너무 민주화, 공세적으로 보기엔 군사력이 강하지 않음.

신기영: 중국, 전통적으로 패권적이지만 방어적인 식의 주권국가였다고 하면. 좀 더 평화적, 공격적으로 현재의 질서를 극적으로 변화시킨다? 하지만 이를 추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패권 유지하려는 국가라고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서양과 전쟁 한 쪽? 일본 경우도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 공세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상대방의 인식의 문제와 본인이 생각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불일치 할 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음. 일본에 대한 동아시아 '인식'은 공세적이다. 정상국가화를 위해 틈만 있으면 확장하려고 한다. 약간 imperial한 국가인 것. 역사적인 학습에 의해서 전후 일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경험적으로 느끼면 아베의 안보 법안의 통과과정의 일본사회의 반응 등을 보면 반대로 생각된다. 일본은 평화국가다. 대부분의 인식은 우리는 평화국가이고, 제국주의 포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다. 갑자기 전쟁국가로 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 60%의 일본국민들의 반응이었음. 일본의 일부 우경화된 지도자의 행위를 갖고 일본의 identity로 봐야 할까? 일본 전체가 가진 potential identity는 평화국가여야 하고, 평화국가임을 가정하는 일본 대다수의 사회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안보 개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일본, 특히 동아시아에서 보는 일본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일본의 인식의 차이도 있다. 동아시아 각국에 있으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는 sovereignty 이전의 imbalance의 문제인가? 인식이 공세적인데 사실상의 정체성은 평화적이라면? 일본도 동아시아, 평화의 공존이 가능한 어떤 식의 자원, 가능성은 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이해에 중요하데,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김지영: 평화적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의 인식은 그럴 수 있다. 이전의 카첸슈타인의 연구는 일본의 여론조사, 일본의 국민들의 정체성은 분명 평화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의 정체성을 시민의 정체성과 운영 엘리트들의 정체성을 분리한다면 자민당이 지키려고 하는 신사참배, 교과서 문제 등을 보면 좀 다르다. 일본의 정체성은 시민들의 정체성도 있지만 냉전-탈냉전 이후의 일본을 이끈 엘리트 그룹, 그들의 행태를 인식해야 한다. 평화정체성도 있지만. 또한 중국의 정체성을 '평화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명청기의 중국이 평화적이다? 과연 중국의 역사를 뒤집어 봤을 때, 평화적으로 조공한 국가들에겐 시혜를 했지만 외교 문제 발생이나 복종 안하면 과감히 짓밟았다. 그것도 우리가 명청 시대, 유교라는 이미지 속에 중국의 이미지를 평화로웠던 국가로서 인식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정환: 주권의 불안전성으로 주로 예를 드신 것. 두 개의 중국, 두 개의 한국. 일본의 보통국가 또는 평화국가. 중국의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함. 중국의 미완선성의 핵심. 동아시아의 중심 아젠다는 그게 아니지 않나? 역사와 영토. 이도 분명 주권의 문제인데, 주권을 분리하면? '상대적 주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즉, 우리-외국과의 관계인데 한-일 역사, 영토문제, 중-일 센카쿠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종의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국가의 전반적 지향성, 성격은 무엇인가는 별개이다. 주권과 통합할 수는 있지만. 주권의 불안전성에서 동아시아가 유럽과 모두 다르다? 샌프란시스코는 다 관계가 해결 안 된 것. 미국의 대충 해결한 것이다. 서로 간 관계의 문제. 중국, 일본도 자기는 누구인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는 상대방과의 관

계를 통해 민족주의를 동원하지만 계속 자신의 역사 속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닌가. 민족주의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아키텍처의 구조적 문제다. 그러나 아키텍처를 더 나눌 수 있으면, 논리를 만드는데 더 재밌고 연결성. 구체적으로 역사, 영토. 역사/영토가 보통국가화나 통일이 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님. 분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신기영: 상대적 주권 개념. 유럽적인 베스트팔렌 적인 주권개념, 국민국가. 유럽국가에서 나온. 끊임없이 싸움. 각 국가들이 똑같은 주권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감. 항구적 개념? 동아시아는 그렇지 않다? 주권개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incomplete이기보다는 상대적인 주권. 어떤 주권? 모델을 유럽식에 둔다면 incomplete한다고 보이지만, 모델 자체를 다르게 본다면? 정체성을 포함한 상대성을 염두한 주권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는 상대방과의 규정에서도 결정된다. 일본도 미국 생각 안할 수 없고, 중국도 생각 안할 수 없음. 서구나 아시아나. 내부적, 역사적으로는 평화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한 자부심? 자민당 내의 변화를 시도하긴 했으나, 50년 간 자민당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의회구조가 있었다. 2/3는 안넘는 선거체제가 있어서 저지해옴. 거기서 형성된 평화 정체성은 사실 크다. 시민사회 일부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적인 의견도 60-70%가 평화헌법 반대를 하고 있다. 평화 정체성 자체도 아시아와의 경험 내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역사, 영토문제에서 상호침범하지 않겠다는 자부심이 생김. 불완전한 주권이기 보다는 relative sovereignty도 중요한 듯.

김애경: 주권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일반적인 주권의 특성이 계열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중국, 자신들이 주권불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듯. 남북한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가 주권과 다르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 주권이 완전, 불완전한지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전재성: 신기영 선생님의 논의 insightful하다. 주권을 형성하는 정치력의 기반이 시민사회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다르다. 일본은 자기인식-타자인식이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안보딜레마가 더 심할 수 있다? 이는 경험적으로 좋은 가설. 자기국가가 자기국가에 대해서 가진 인식과 다를 때, 안보딜레마의 심화? 심화라면 동아시아는 심해지고 있음. 자기인식의 기반이 시민사회인 경우는 지속적, 정치권에 반영되는 매커니즘이 중요한데. 중국은 자기정체성이 social level에서 작용하는데 시민사회는 아님. 정치적 의지가 정권 투표로 반영되는 형태는 아님. 권위주의 일당이 이를 manipulate, 요구하는 관계가 다를 듯. 가변적일 수도 있다. 중국의 데모 분석처럼 민족주의와 얽힌 문제 속에서 중국이 이를 manipulate하는 것인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성의 형태, 내용이든 자기인식의 형성과정을 나누어서 연구 아젠다로 제시해야 할 듯. 일본이 스스로 평화국가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고, 정치 집권당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제대로 반영되는가 아닌가는 정치적인 부분이므로 같이 해야 할 듯. norm entrepreneur의 역할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정한 threshold를 넘어서면 normative 원칙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중, 일에서 상호 역할하는 쪽도 있는 것 같다.

조공, 제국-제후국의 관계를 보면 많은 것을 억압하고 많은 것을 요구. 이는 연구에 따라선 경제관계에서 조금 다르지만 조공-회사에서 중국-조선만 봤을 때, 누가 경제 이득을 얻었나? 결국 주변국이 얻는 것이 더 많았다. 정치적 의미의 조공이었지, 중국은 물자가 많았고 조공

받아서 특별히 얻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영토를 넓히면서 직접지배를 하려고 하지는 않음. 베트남, A.D 초반-1000년 까지 지배 빼고 한쪽이 지배한 적 없었고, 몽골만 직접 지배. 나머지는 유화, 기미. 행정적 관리 능력이 없었음. 군현제가 직접 지배하기 보단 봉건적 관계. 봉건제후 관계 확인하고 간접 지배하는 것이 최대치였다. 방어적이지만 억압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주종의 조직원리 간에서 발생. 중국이 만약 이를 부활시킨다면 방어적이나 억압적일 수도 있음. 경제나 buying power 등으로 정치적 의미의 dominance는 유지하되. 방어적인 것을 넘어설 지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 비추면 그럴 수도 있다. 결국 미중 세력전이 있을 때 미국은 그런 중국, 중국이 생각하는 자기인식과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공격성 사이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미국은 re-balancing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중정책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평한다. 따라서 뒤섞인 담론이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의 전근대 패권에 빗대서 공격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근대적 의미의 중국을 공세적이라고 하는지의 두 개가 섞여있다. 안보딜레마는 증폭되는 중이고 우리는 이를 구별해야 전략이 나올 듯하다.

상대적 주권. 주권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은 많은 규범들의 package임. 대내적 최고성을 가진 주체가 대내적 권위 확립, 영토적 통합성, 내정불간섭, 폭력의 독점, 타국의 사회적 인정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패키지를 받아 국제법 행위자로 되었는데, 다 역사적으로 다른 케이스에서 gradual하게 감. 내정불간섭은 당하면서 대내적 최고성은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동아시아만의 각 단계, 아이템 간의 다른 주권의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맞다. 그런 면에서 그 패키지가 어떻게 조합되었는지가 다른 것이 상대적 주권으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지역체제가 지구체제의 일부이고 특히 우리의 지역체제는 글로벌에 직접 열려있어서 아프리카, 중동과 다르다. actor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global한 절대적 주권개념이 침투한 부분도 있다. 주권을 아주 크게 법적, 경험적 주권으로 나눠서 보면 동아시아는 200개의 경험적 주권의 일원 중의 하나인 것은 맞는데, 법적 주권의 불안전성은 없다. 그러나 경험적 주권의 sovereignty의 차이로 더 주권적 나라와 덜 주권적 나라는 있다. 더 주권적인 것과 덜 주권적인 것은 밀착관계이다. 탈식민적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이를 잘 가리는 매커니즘, 선진국의 구도 등이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의 주권이 법적으로 완전하지만 경험적으로 불안전하다. 분단 고착화하는 외세 등 중국의 경우도, 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한 국민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문제. 중국, 대만의 문제. 내인론처럼 우리의 잘못?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시아 국제정치 구조의 문제에서 전통-근대의 편차가 있다면 주권 불안전. 영토도 상대적 주권개념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 예전의 영토 개념을 선의 배타적 개념으로 인식했는지, 면의 개념으로 인식했는지? 면-선 개념의 존재 여부에 대해 국사학자들의 입장은 나뉘어져 있다. 만약 지금의 영토문제가 생긴 것이 '영토' 자체의 소유개념이 달라져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 조직원리가 달라서 생긴 문제다. 영토가 이전에도 배타적으로 사고되었고 지금도 싸우는 것이면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다. 그러면 싸움이 다른 것이다. 완전한 보통국가화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때, 같은 논리면 온존하는 문제가 있다. 비주권국가들의 역사, 영토문제의 성격과 주권국가화 된 이후의 단위들 간의 영토, 역사문제의 성격이 다르다. 계속 온존하다고 해서 주권의 완전성이 변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지구적인 것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 여전히 상대적 주권 개념도 있지만 유럽 국제정치이론의 적용을 계속 강요받는 부분도 있다.

신기영: bounded sovereignty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가? 그것도 역시 상대적 주권개념의 장점은 관계성을 중시함. 단위가 완전히 당구공 모델이 아니라 단위 간 관계가 identity를 형성하므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주권이다. 유럽도 당구공들의 관계? bounded sovereignty라고 하면 모든 주권, 법적 주권은 완전하지만 이론적 전제. 경험적으로는 모든 국가들 다 제한적. 더 보편적이면서, 동아시아적인 boundedness는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은용수: 상대적 주권도 필요하지만 국제체제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면 헤겔의 '인정욕구'를 적용해볼 수 있을 듯. 헤겔, 인정욕구에 대한 투쟁의 역사로 봄. 지역 내 한반도 내의 정당성 투쟁, 동아시아의 인정 투쟁, 세계차원의 인정 투쟁이라고 본다?

전재성: 주인-노예의 변증법적인 것이 있음. 우리는 주인들 관계의 것을 가져왔는데, 노예들 간의 관계도 억압되어 있음. 주인처럼 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님. 노예들 간의 배타성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주인-노예의 관계도 있고, 실제 극복해볼 수 있다. 하지만 analogy인지 '필연적'인지 애매한데 필연적으로 주인-노예의 연결이 있는가, 아니면 노예가 아직 주인이 안 되었을 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후자의 관점은 서구 발전론에 빠질 한계가 있음.

발표 2_ 조은정, “동북아 핵질서와 미국의 동맹전략: 한중일-미국 원자력 협정 연구”

연구회에서 기존의 메타이론적 연구 분석을 해왔으며, 2단계에선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복합조직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연구를 시도해보았다.

한미 원자력 협정, 2015년 6.15 발효. 기존의 미국이 타 국가들과 맺은 유사한 원자력 협정들이 많이 있음. 1953년 이후, 개정 시마다 비슷한 format으로 생김. 이번 협정은 1.5 트랙 같다. NPT 체제의 한국의 위치는 '비핵국'임. NPT 체제 핵국, 비핵국, 준핵국이 있음. 동북아를 보면 유일하다고 볼 정도로 핵-원자력 발전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NPT체제 하의 이 3가지 status를 공유한다. 오늘날 벌어지는 글로벌 핵질서의 축소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는가? 복합 조직원리 이론을 이용해보는 시도. 복합조직원리를 설명하는데 왜 핵을 골랐는가? 핵-원자력. 의미를 폭넓게 쓰려고 함. 원자력이라고 안보가 아닌 것은 아님. 핵이라고 꼭 안보인 것은 아님. 양면성 때문. 원자력 협정을 맺지만 사실상 미국의 양자협정에서는 비확산의 노력이 상당히 늘어있음.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이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중적이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동아시아의 핵질서는 다층적, 다면적 성격을 가진다. '복합'의 고민이 남아있으나, 다층적-복층적-다면적이라고 표현하여 핵 질서를 decode하려고 노력해 봄. 세계적 수준의 NPT의 핵규범이 있음. 냉전체제의 크게 바뀐 것 아님. 초기 냉전체제에서는 동맹관계가 큰 역할. 동맹관리가 동아시아 핵질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대등한 핵 국가들 간의 관계로서 핵규범이 관계를 미친 것이 아니라 동맹, 비대칭적인 수혜관계가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가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 냉전시대. 한-일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가 큰 역할. 탈냉전기는 또 다른 동학이 보이는데 역내 한-중-일 간 미국을 벗어나 동아시아 내부의 핵, 역학관계가 생김. 스

스로 뭘 해보겠다는 자체적 움직임들이 나온다. 90년대 이후 북핵문제가 나오면서 아시아튠 등이 제안되면서 중국, 일본이 리더십을 갖고 우리도 우리만의 control tower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에서 내부적으로 핵, 원자력을 안보화함. 그럼 그 경쟁문제가 이미 안에서 대두되는 부분. 동아시아 핵질서를 다룰 때 복잡성을 더함. 마지막으로 가장 미약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질서는 범아시아 협력구상. 특히 미소갈등 해소 이후 탈냉전기 부상, 미약, 제한적으로 협력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안전보장, safeguards의 문제, 역내 안전규제의 법률을 만들고 규제 노력은 되고 있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범 아시아적 중요 축. 인권문제. 이런 문제와 결부되어서 함께 주요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핵질서의 다층성, 과거-현재-미래의 질서가 혼재된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핵질서'라고 이야기할 때, 단선적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안은 복잡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의 논문에서 주의 깊게 볼 것, 두 번째. 동맹관계에 주목. 개요는 이러한 다층적, 다면적인 핵질서의 구성원리를 살펴본 뒤에, 대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전략과 어우러진 미국의 핵체계 전체가 통계를 이루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하려.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핵 정책, 60년 동안. 기초들이 일관됨. 60년 동안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관된 기초. 'no-control, no-development.' 통제 없이 개발 안하겠다. UN의 1회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소련의 외상과 설전. 소련, 영국이 차례로 핵 보유 이전까지는 협력을 전혀 하지 않는 봉쇄정책. 53년도 이후의 협정들도 굉장히 교묘한 기제로 직접적으로 초국가적, 미국의 핵 규제 법규로 상대 국가들을 규제하는 초국가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지속.

대표적 기초는 centralization. 일종의 중앙화. 모든 원자력 핵질서, 관리 통제를 일원화. 일종의 패키지들이 등장. 사실 핵을 처음 갖는 국가가 미국이고, 법도 먼저 만들었다. 미국과 원자력 관계에서 협약을 맺는다면, 미국의 규범과 미국식 기준을 따라야 하는 과정. 미국식 핵규범, 핵 기술이 자연스럽게 전파. 미국식 핵 논리가 핵 거버넌스로 수용됨. NPT 체제, 70년대 본격화. section 1, 2, 3. 양자 협력에 있어서 항상 들어감. 23개국과 협약 유효하게 지속. 이런 협약국들과 미국의 핵 확산 방지들을 위해 9개의 선별조건 제시 중. 이런 부분들이 non-proliferation들의 규범을 확산하기 위해 끼워팔기 식의 조항을 넣기도 함. 그런데 실제 핵심. 예외는 2006년 인도-미국의 원자력 협정. 인도의 NPT 비가입국. 원자력 협정으로 section에 넣을 수 없게 됨. 동아시아 핵질서 관련, 어떤 식으로 조직, 포섭이 되는지?

한미 원자력협정 분석 시도. 한미, 핵국-비핵국의 비대칭적 관계임을 염두해야 함. 주요 내용들. 표 비교. 미국은 모델화된 협정을 기준으로 봄. 1974년까지는 큰 변화 없음. 2015년의 변화, 구체적인 핵연료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협력에서 달라짐. 더 제한된 것이 풀리는 모습. 한국에 이용된 핵연료 가공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 보장. 원자력 수출할 때, 원전건설과 동시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교육과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같이 해줘야 함. 한국이 못하므로 원료를 미국에서 가져와서 미국 공급처에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아야 함. 미국-한국이 제3국에 원자력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법적 허용을 받음. 재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서면합의에 대해선 invitation만 받은 것인지 평가 애매. 가능성의 여지를

남았지만 수락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음. 조건은 명기된 시설이 어디에도 한국에 없다. 그런 맹점이 있음. 사실 할 수 있는 데가 미국 한 군데, 한국원자력연구소 내부인데 시설이 없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평가됨. 명기된 시설을 첨부하기 까지 굉장한 노력, 공이 들 것이다. 비-invitation이라고 평가함.

소결: 한미 원자력 협정만으로는 동아시아 안보임. 미일 원자력 협정은 1987년도 마지막에 이루어졌음. 일본은 준-핵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대비되는 점임.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NPT 체제의 준핵국, 비핵국과 준핵국의 차이가 있음. 미국과의 동맹에서 어떤 상대성, 차이를 일으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도 차후 보완 예정.

중미관계. 미중원자력 협정은 1985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천안문 사태로 제재조치 받아 실효성 없었음. 2015년 4월부터 한국처럼 미중원자력 협정도 발효 위해 노력 중. 중국이 흥미로운 점은 미중은 핵국 대 핵국 관계이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 지금까지 기존의 적대적 핵 국가들끼리의 협정 사례? 미중 원자력 협정의 특별함이 있는지 궁금.

이런 한-중-일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문서를 살펴보아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어떤 지형도를 갖고 있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 합의를 찾는다면, 동맹원리가 비대칭적 핵 관계에 중요. 탈냉전적으로는 규범 역할이 중요. 규범이 기묘한 역할을 함. 일종의 양날의 검. 한 편으로는 핵국, 핵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미국에게는 강력한 nonproliferation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위계적인 핵 질서를 이 지역에 확실히 심어주려. 공식적, 합법적 방법으로. 이것이 보편화된 규범으로 공식적, 명시적 형태로 핵 질서의 계층화가 정당화되고 있음. 바람직한 규범의 공고화인가? 사실 이런 패러다임 전환, 상대적으로 비대칭적 관계의 협력국, NPT 체제의 비핵국들이 자신이 해보려는 정치적 공간, autonomy를 넓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규범이 규범만으로 추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적인 규범이라면, 그 이전의 규범보다 더 많은 agreement를 만들어서 이를 넘어설 가능성은 있는가? 유라툼을 구성하던지 핵질서 무게중심의 이동, 복합화를 예상할 수도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보듯, 상대적으로 핵질서에서 약소적인 행위자들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토론>

신기영: 3.11 이후, 동아시아 내의 공동적인 원자력 문제의 대처에 대한 논의, 시도들이 있었다. 후쿠시마 사건 이후 일본은 가장 인접국인 한국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가 등의 논의가 있지 않았는가?

조은정: 재난 시의 대처 방안, 공동대응을 위한 핵 안보 정상회담 등 논의가 심화되었었다.

신기영: 양자관계를 넘어서 미국과 다른 지역 내의 실질적인 사건 이후의 필요성으로 지역 내의 다른 형식의 협력체제가 있지 않을까? 한일 동시에 핵 재난 상황에서의 협력 방안 등.

조은정: 아시아 핵질서 양자로 유지되어왔음. 다자로는 안 될까? 왜? 근대국가의 전형. 안보의 전형이 핵심인데, 손 놓고 협력으로 가능한가? 어렵다. 사실 3.11 보고는 희망적이기도 했

음. 생사의 초국가적 문제가 터지면 기존의 영토, 역사문제 등이 수면으로 잠기고 생존문제 해결을 위해 덤빌 수도 있음. 그러면 다자적, 원자력 안전이나 핵으로 오히려 하나 되는 아시아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음.

김애경: 동북아 지역, 미국이 원자력 문제에서는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음. 한중일과 어떤 다층적, 다면적 협력을 하면서 질서를 꾸려 나가는지...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일, 미중 비교를 했는데 미국은 아직 더 봐야 함. 최소한 한미 원자력 협정만 보면. 다른 것은 잘 모름. 당사자, 서면합의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서면합의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떤 함의가 있어서 넣었는가? 미국이 한국과 원자력 협정 중에 워딩을 달리 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떤 거버넌스로 유지하려고 하는지?

조은정: 얼마나 다른지 보는 중. 지금까지 보기엔 조금 다름. 서면은 형태, 내용변경에서 당사자들이 서면합의만 가능하다. 이는 서면이 중요함. 당사자도 중요. 당사자, 한미 지칭. 서면합의가 가능해진 것, 이전에는 불가능했음. 변경 시 패널티를 물거나, 원자력 협정이 완전 도루묵 될 빌미가 있었는데 이제 서면협의를 개정하지 않고. 직접 만나거나, 협정을 다시 맺는 것 수준 아니라 당사자들이 일종의 사전 통보를 해야 함. 사전 통보를 하고 허락을 해주겠다는 식의 규칙을 간소화.

1988년, 미일은 이미 이런 수준. 준핵국의 일본의 위치를 보면 2015년도, 일본과 우리 비교해 왔음. 상당 부분 한국의 요청에 수긍했던 부분. 핵 주권을 조금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는 점. 하지만 여전히 농축, 우라늄, 핵연료의 제한이 풀림. 일본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음. 그런 점에서 큰 차이. 일본이 1988년 맺은 원자력 협정과 근접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격차를 좁힐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정환: 북한의 핵개발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원자력 협정이 미국이 가장 적나라하게 상대방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협정임. 다른 것은 '쌍방 간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상대를 일방적 규제. 미일동맹,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패권이 나머지들을 동맹들을 지원하지만 동맹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제한. 이 주제는 동맹이 들어가는데, 핵질서와 동맹전략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인과관계인지? 동맹'에도 불구하고' 인지?

2015년 한국의 재처리 시설을 만들려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일본에 재처리를 하는 것을 보내는 안은 어떠한가? 국내적으로 용납이 잘 안 되는 것 같음. 한국 내의 일관된 사이클이 있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는데 동아시아 원자력 협력체제를 본다면, 재처리 시설의 지역 내에 선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 서로 지방적으로는 피하되, 국가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동아시아 지역공간에서는 빌리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딜레마가 여전히 있음.

조은정: 동북아 핵질서와 미국의 동맹관계, 인과관계인지 그냥 관계인지? 명확하게 보이기에 미진했음. 그냥 던져 놓았다. 두 키워드를 보는데. 우선 동맹전략이 동북아 핵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전제. 보편적 핵규범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한미일이 맺은 동맹관계가 이 지역의 핵질서와 밀접히 맞물림. 원자력, 에너지 식이 아니라 안보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리면서 일종에 오히려 동북아의 대 세계 전략의 응축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압

축적으로 한중일에서 볼 수 있지 않은가?

재처리시설 왜 가지려 하나? 지금은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냄. 핵연료, 붕이 필요. 끝까지 연료를 공급해야 결과가 나옴. 최근 기술은 핵 융합. 재처리시설로는 핵 분열 이후 재처리, 고 농축 우라늄들이 완성된 물질로 핵 융합 가능. 이는 원료 값이 안 들고, 꿈의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음. 선두는 일본, 프랑스. 핵의 양면성을 이용한 것. 핵 재처리 기술 이용에 대해 한국의 과학자들도 갖기를 열망하는 중.

김지영: 1988년, 91년의 경우는 한반도 전술핵 철수. 71년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 이러한 것들이 탈냉전 이후의 한반도 핵 철수 등이 동시에 계획 하에서 일어난 것인가? 핵무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가? 일본은 1988년에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왜 2015년에서야? 박정희 정권의 핵에 대한 도발, 정권의 신뢰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1988년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미 플라자 합의 이후 세계 강국인 상태여서 정권, 경제적 안정으로 자주적 성격의 요구였는지?

조은정: 1988년의 시점, 협상성공까지 나카소네-레이건의 긴밀한 관계. 당시의 미국의 당면 이슈들 중에서 bypass라고도 설명하기도 함. 우리는 1988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평화적 에너지 사용까지 반대한 것은 아니나, 불안정한 민주화 과정에서 동시에 북한에 의한 테러 등. 미국이 일종의 안보 우산, 핵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작전권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cost-effective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여기서 미온적이었거나, 미국이 늦추거나 미국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반도, 55, 56, 78 시점들. 미국의 동맹전략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보는 것이 필수적. FRUS 등 아카이브 볼 필요가 있음.

은용수: 아카이브의 디테일한 분석이 뛰어나고 남들이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문서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 듯. 이론적 차원에서만 재미있는 퍼즐을 던져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핵 질서, 유지 또는 변형의 매커니즘 등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하면 좋을 듯.

이정환: 1988년은 새로운 협정. 미국이 일본에게 승인 받아서 재처리를 하게 된 것, 일반적으로 일본이 잠재적 핵국가인 것을 인정한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증대로 인해 국내에서 사이클 해야 하는 산업적, 경제적 이유였는가? 기존의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지?

조은정: 두 가지 다. 표면상으론 그런 논리로 일본이 밀어붙여서 미국이 승인했으나, 주변국들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일본의 공세성의 전초라고 인식했음. 플루토늄의 보유량, 일본이 우선적으로 핵 미사일, 핵폭탄은 없지만 기술발전, 고유의 자원을 통해 보면 3개월 이내는 만들 수 있음. 당시의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한 듯.

이용욱: 테크니컬한 것이 많아서 쉽게 써야 할 듯. 한일, 미일. 협정의 hierarchy가 있다면 일본은 어디까지 협력의 대상이고 한국은 어디까지 되는지.